'Inconceivable' Australia would not join U.S. to defend Taiwan - Australian defence minister

<https://www.reuters.com/world/asia-pacific/inconceivable-australia-would-not-join-us-defend-taiwan-australian-defence-2021-11-12/>

MELBOURNE, Nov 13 (Reuters) - It would be "inconceivable" for Australia not to join the United States should Washington take action to defend Taiwan, Australian Defence Minister Peter Dutton said on Saturday.

On Wednesday, U.S. Secretary of State Anthony Blinken said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would take unspecified "action"](https://www.reuters.com/world/asia-pacific/us-allies-would-take-action-if-taiwan-attacked-blinken-2021-11-10) if China were to use force to alter the status quo over Taiwan.

"It would be inconceivable that we wouldn't support the U.S. in an action if the U.S. chose to take that action," Dutton told The Australian newspaper in an interview.

"And, again, I think we should be very frank and honest about that, look at all of the facts and circumstances without pre-committing, and maybe there are circumstances where we wouldn't take up that option, (but) I can't conceive of those circumstances."

China's military said on Tuesday it [conducted a combat readiness patrol](https://www.reuters.com/world/china/china-opposes-us-legislators-visiting-taiwan-by-military-plane-state-media-2021-11-09) in the direction of the Taiwan Strait, after its Defence Ministry condemned a visit by a U.S. congressional delegation to Taiwan, the democratically governed island claimed by Beijing.

"(China's) been very clear about their intent to go into Taiwan and we need to make sure that there is a high level of preparedness, a greater sense of ­deterrence by our capability, and that is how I think we put our country in a position of strength," Dutton told the newspaper.

China has not ruled out using force to bring Taiwan under its control, but has played down the notion that war is imminent.

**日, 호주와 ‘中대항 준동맹’ 강화… 군사훈련 협력 확대**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11125/110445283/1>

동아일보, 박형준 특파원, 2021-11-25

일본과 호주가 상대국 군대의 자국 방문을 쉽게 하는 ‘공동훈련 등에 관한 원활화 협정(RAA)’을 내년에 맺을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4일 보도했다. 일본은 유일한 동맹국인 미국하고만 RAA를 맺고 있는데 이를 호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일본이 내년에 부담하는 미군주둔경비는 2000억 엔(약 2조 원)대 후반으로 사상 최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이 해외와 안보협력을 다각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RAA를 맺으면 양국 군이 공동훈련을 위해 상대국에 입국할 때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훈련에 필요한 장비를 가져갈 때 수속도 간소해진다. 더 자주 훈련할 수 있고, 작전도 다양하게 전개할 수 있게 된다. 일본은 미국을 제외하고 호주와 처음 RAA를 맺어 ‘준동맹국’ 관계를 공고히 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과 호주는 중국에 대항하는 안보 협력체 ‘쿼드(Quad)’ 멤버이기도 하다.  
  
일본과 호주의 방위협력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이달 실시된 양국 공동훈련에서 일본 해상자위대는 호주 함정을 경호하는 ‘무기 등 방호’를 했다. 자위대가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 군대를 경호한 건 호주가 처음이었다. 일본 육상자위대와 호주 군은 연락관을 서로 파견하기로 했다. 니혼게이자이는 “중국에 대한 견제가 양국을 (안보협력 방향으로) 움직이게 했다”고 분석했다.

방위협력은 가장 낮은 단계인 외교 및 국방장관 사이 2+2회담부터 가장 높은 단계인 안전보장조약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일본은 미국하고만 안전보장조약을 포함해 모든 종류의 방위협력을 하고 있다. 일본이 호주와 RAA를 맺으면 안전보장조약을 뺀 모든 방위협력을 하게 된다. 일본은 한국과는 기밀정보를 교환하는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만 맺고 있다.

미국과 일본 정부는 내년부터 5년간 일본이 부담할 미군 주둔경비를 연간 2000억 엔대 후반으로 하는 방안을 놓고 조정에 들어갔다고 마이니치신문이 24일 보도했다. 올해 일본 측 부담금이 2017억 엔인 것을 감안하면 내년엔 500억 엔 이상 늘어나게 된다. 1993년의 304억 엔 부담금 증가가 사상 최대였는데, 이를 넘어서는 인상 폭이다. 금액 기준으로도 사상 최대였던 1999년 2756억 엔보다 많을 가능성이 높다. 마이니치는 “군사력을 강화하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주일 (일본 정부가) 미군과의 협력 강화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방위력 강화를 꾀하고 있다”고 전했다.

테이블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호주, 독일과 수소파트너쉽 체결**

<http://www.ga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2125>

가스신문, 양인범 기자, 2021-11-24

마이닝위클리에 따르면 호주와 독일 간 수소기술 개발에 대한 양국 협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이니셔티브가 출범했다.  
  
연방정부는 호주재생에너지청(ARNA)을 통해 하이게이트(HyGATE)로 알려진 새로운 공동 수소 혁신 및 기술 인큐베이터에 앞장서기 위해 수소 공급망을 따라 실제 시험, 실증 및 연구 프로젝트를 지원할 예정이다.  
  
ARENA와 독일 연방교육연구부는 2022년 1/4분기에 자금 지원 계획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호주는 하이게이트 이니셔티브에 5천만 호주 달러를, 독일은 5천만 유로를 투자했다. 그 자금은 새로운 수소 프로젝트에 투자될 것이다.  
  
앵거스 테일러 호주산업자원부 장관은 지난 6월 수소기술 협력을 위한 호주-독일 수소협정 체결에 따른 하이게이트 프로젝트라고 밝혔다.  
  
테일러는 “정부의 포부는 호주와 에너지 수요가 많은 독일 등 교역 상대국에 수출할 수 있는 저렴하고 깨끗한 수소를 생산하는 것”이라며, “호주-독일 수소 공급망 공동 연구인 하이서플라이의 첫 번째 보고서가 최근 발표되면서 호주산 수소가 독일에서 증가하는 수요를 공급할 수 있는 큰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하이게이트 프로젝트를 통해 독일과 파트너십을 맺으면 호주 수소산업 발전이 가속화되고 넷제로의 길에 새로운 일자리와 경제적 기회가 창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에너지 및 배출가스 감축부의 팀 윌슨 차관보는 정부의 기술 투자 로드맵에 따라 수소 가격을 낮추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윌슨은 “수소의 가격을 낮추고 광범위한 채택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술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제 파트너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며, “독일의 수소 기술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면 우리 국내 산업이 수소 공급망 全 단계에서 부가가치를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호주의 저배출 기술 특별 고문인 알란 핀켈 박사는 독일과의 수소 협력 관계를 중개하는 것을 도왔다.  
  
호주의 자금은 저배출 기술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 2021~22년 예산 이니셔티브에서 약속한 5억 6580만 호주 달러에 따라 제공된다.  
  
호주정부는 2030년까지 호주가 주요 글로벌 수소 공급국이 될 것이라는 비전을 제시하는 국가 수소 전략을 2019년에 발표했다.  
  
호주정부는 수소산업의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해 12억 호주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있으며, 호주에서는 최대 7개의 청정 수소산업 거점을 개발하기 위해 4억 6400만 호주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청정 수소는 2050년까지 16,000개의 일자리를 직접 지원할 수 있고, 관련 재생 에너지 인프라 구축으로 13,000개의 일자리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수출과 국내 사용을 위한 호주의 수소 생산은 또한 2050년까지 500억 호주 달러 이상의 추가 국내 총생산을 발생시킬 수 있다.  
  
출처 : 가스신문(http://www.gasnews.com)